

귀촌인들의 영농전환 의향 영향요인 분석

홍윤실* 전익수**

Keywords

귀촌인(urban-to-rural migrant), 귀촌 실태조사(urban-to-rural migrants survey), 영농전환 의향(intention of transition to farming), 귀농(urban-to-rural farming)

Abstract

This paper identified various factors causing urban-to-rural migrants to have the intention of farming. The 2019 urban-to-rural migrants survey showed that 12.3% of the migrants with no experience of farming had the intention of farming. If this intention transforms into action, the transition will make up for a gradual decrease of urban-to-rural farming. This paper's analysis was based on the microdata of the 2016 urban-to-rural migrants survey with 1006 samples—the only microdata of the year available. The specific factors were selected and made as variables in a model from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dering the urban-to-rural migration-related, economic, sociocultural, and demographic aspects. Preparation duration, education, and governmental policy in the urban-to-rural migration-related aspec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mily income prospects, agriculture-related jobs, and business start-up experience in the economic aspec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ther residents and satisfaction levels in the sociocultural aspect and the number of family in the demographic inform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ll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were positive except business start-up experience. Implications were added based on the results.

차례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귀촌 실태 및 현황 | 5. 요약 및 결론 |
| 3.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방법 | |

* 중평군 증평인삼농촌융복합사업단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e-mail: iksuinje@cbnu.ac.kr

1. 서론

최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된 2019년 귀농·귀촌 전체 인구수는 460,645명인데, 2017년에 516,817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¹ 이 중 귀농인구는 2016년에 20,55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9년도에는 통계청에서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3년보다도 6.6% 줄어든 상태이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 영농구조의 대안 중의 하나로 부상해 왔던 귀농인들이 최근 줄어드는 현상이 추세화되고 있는 것은 귀농인 감소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3~2019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귀촌 인구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귀농·귀촌 전체 인구에서 귀농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4.1%에 불과해 귀촌인들이 귀농인으로 원활하게 전환된다면 귀농인 감소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생산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귀촌인 중에 4년 이내에 농업생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즉 영농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귀촌인의 비중이 5.8%로 나타났고, 5년 이후까지 포함할 경우 12.3%로 나타났다. 의향이 있는 것과 실제로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귀촌인들에 대한 정확한 추적조사가 되지 않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줄어드는 귀농인들의 수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이들 귀농전환 의향자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간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 연구는 김기홍(2018)이 지적한 대로 귀농과 귀촌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 통칭하여 취급해 왔다. 2015년에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귀농어귀촌법)에서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하고 있듯이 귀농은 직업적 측면에서 농업과 관련되고, 귀촌은 지역적 측면에서 농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함께 묶어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귀농인과 귀촌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은 귀농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정책으로 통칭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김정섭·김종인 2017; 전익수 2019). 귀농 관련 연구는 전익수(2019)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귀촌 관련 연구는 귀촌인에 관한 독립적인 연구보다는 귀농·귀촌 연구에 포함된

1 귀어인 통계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한 부분으로 또는 사례연구로 제시되고 있다(예, 마상진 2018; 박대식 2017a; 박대식 외 2018a, 2018b; 장인봉 2018). 이러한 접근은 귀농·귀촌인 장기 추적조사(2014~2018)를 위한 농촌진흥청의 패널구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농촌진흥청 2017; 마상진 외 2015; 마상진 외 2018). 조사를 위한 패널을 구축할 당시 정책적 필요가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종합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하여 조사한 이후(김정섭 외 2016) 최근 2019년 실태조사까지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하여 각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정섭 외(2016)는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에서 귀농인 조사 결과와 함께 귀촌인 조사 결과를 구분하여 함께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지만 이후 행해진 실태조사들에 대해서는 단순 결과 공표와 같은 보도자료 외에는 관련 연구가 없었고,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추후 연구를 위한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과 같은 기초자료 공개 또한 없었다. 물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같은 관련 기관의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농촌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박대식 외 2018b)와 귀농·귀촌 현상 등으로 파생된 인구, 경제활동, 공동체, 생활여건 등 농촌의 다양한 변화 실태를 추적한 조사(성주인 외 2019) 등이 있었지만 귀촌인들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특히 귀촌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귀농·귀촌 종합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수행된 실태조사 자료 중 귀촌인 조사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귀촌인들의 농업생산으로의 전환, 즉 영농으로의 전환 의향에 미친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귀촌 관련 정보,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귀촌인들의 영농전환 의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귀촌 관련 정보는 귀촌 연도, 귀촌 준비 기간, 가족 지지도, 귀농·귀촌 교육, 정착 자금, 정부의 관련 정책 수혜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경제적 측면의 정보는 귀촌 전 가구소득, 귀촌 후 현재(조사 시점) 가구소득, 향후 가구소득 전망, 귀촌 후 농관련 직업 여부, 창업활동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 정도, 문화 및 여가활동 지역의 범위, 귀촌 후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에 조사 대상자의 개인 및 가구 정보와 관련된 가구원 수, 나이, 가구주 교육 수준, 농업계 학교 졸업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이원선택 종속변수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여러 다양한 요인 중 귀촌자의 영농전환 의향에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귀촌인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해 그간 부족했던 귀촌에 관한 연구를 보완했다는 점과 관련 분야 연구에서 선례가 없던 귀촌인들의 영농전환 의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물론, 귀촌인들이 실제로 영농으로 전환한 경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분명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귀촌인 중 영농전환 의향자가 얼마나 영농으로 전환했는지에 대한 관련 추적조사나 통계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및 자료가 부족하므로 본 논문의 연구는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제2장에서 귀촌 실태를 간략히 제시하고, 제3장에서 이론적 모형과 분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4장에서 분석 결과를, 제5장에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2. 귀촌 실태 및 현황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귀촌인에 대한 통계는 2013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이 통계는 해당 통계의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행정구역 동에서 읍/면으로 이동한 사람 중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에 귀촌인 조건에 충족한 사람들을 정리한 행정자료이다. 귀촌인 조건에서 학생, 군인(사병), 일시적 직장근무지 이동, 귀농인 및 귀어인과 동반가구원은 모두 제외된다(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8).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1>에서와 같이 귀촌인구수는 2017년 497,187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를 제시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귀촌인 수 연평균 증감률은 1.54%로 미약하나마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은 증가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연령별 귀촌인 수

연령 \ 연도								단위: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
계	405,452	439,535	466,778	475,489	497,187	472,474	444,464	1.54%
0~29세	103,102	105,895	123,822	124,888	132,392	125,272	119,542	2.50%
30~39세	110,645	116,231	115,743	118,525	121,073	111,038	101,144	-1.49%
40~49세	73,237	80,996	81,146	80,890	84,028	78,500	73,035	-0.05%
50~59세	64,213	72,765	77,076	78,304	81,327	78,422	74,794	2.57%
60~69세	31,938	36,935	42,047	45,107	48,994	49,423	47,964	7.01%
70세 이상	22,317	26,713	26,944	27,775	29,373	29,819	27,985	3.84%

자료: 국가통계포털. 『귀농어·귀촌인통계』.

또한, 국가통계포털의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는 귀촌에 대한 다양한 실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귀촌 사유와 귀촌 후의 경제활동, 귀촌 후 영농으로 전환 의향(귀농 의향)에 대한 실태를 제시한다. 아래 <표 2>에서와 같이 2019 귀촌 실태조사 사례자 전체 2,086명 중 귀촌 사유의 1순위로 응답한 비중은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가 2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자연환경이 좋아서”, “저렴한 집값 때문에”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승계나 창업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귀촌은 4.8%이고, 농사 외 농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귀촌은 5.5%로 농사 및 농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귀촌 사유의 비중이 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귀촌 사유

귀촌 사유들	전체 사례 수 및 비중
전체 사례 수	2,086명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21.2%
자연환경이 좋아서	19.3%
저렴한 집값 때문에	13.6%
가족 및 친지와 근거리 거주 위해	8.1%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6.9%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6.0%
농사 외 농산업 종사를 위해	5.5%
농사를 짓기 위해서(승계, 창업)	4.8%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	4.2%
비싼 도시생활비 때문에	3.0%
가업(농업 외) 승계 위해	1.9%
자녀교육을 위해서	1.8%
기타	3.7%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9 귀농·귀촌 실태조사』. 순위별 재정리.

귀촌 실태조사 사례자 중 귀촌 후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은 90.0%로 대부분의 귀촌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활동 종류의 비중은 가구주 기준으로 일반직장 취업(정규직)이 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위 자영업(장사, 가게 등) 17.9%, 3위 농사일 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귀촌 후 경제활동 유무 및 가구주와 배우자의 활동별 비중

경제활동 유무	전체 사례 수	2,086명	100.0%
	경제활동 있음	1,877명	90.0%
	경제활동 없음	209명	10.0%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제활동 종류	경제활동 있는 사례 수	1,877명	1,877명
	농사일	8.4%	2.7%
	농산물 가공	0.8%	0.3%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	2.2%	0.4%
	농촌관광사업(펜션 등)	0.8%	0.5%
	농업 임금노동(품앗이 노동 등)	1.4%	0.8%
	자영업(장사 가게 등)	17.9%	4.8%
	일반 직장 취업(정규직)	38.3%	7.0%
	임시직(계약직, 건설기계)	6.7%	3.7%
	비농업 부문 일용직	2.5%	0.3%
	기타	0.5%	0.1%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9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촌 실태조사에서 귀촌 후 영농으로 전환 의향에 대한 실태는 전체 사례 중 82.8%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에 한번도 종사한 적이 없는 사례자 1,7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4년 이내 농업생산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비중은 5.8%에 달하고 5년 이후라고 응답한 비중 6.5%까지 포함하면 12.3%에 해당한다. 즉, 2019년 귀촌 실태조사에서 농업생산에 한번도 종사한 적이 없는 귀촌인 중에서 12.3%는 귀농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²

2 <표 4>에서 농업생산 종사 유무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15.0%의 귀촌자는 귀촌 후 영농으로 전환한 것인지, 바로 귀농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귀촌은 지역적 개념으로, 귀농자도 일차적으로는 귀촌자에 포함되나 귀촌자가 직업적 개념인 귀농자에 모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표 4. 귀촌 후 농업생산 종사 유무 및 향후 영농의향 비중

농업생산 종사 유무	전체 사례 수	2,086명
	한번도 종사한 적 없음	82.8%
	종사한 적 있으나 현재는 종사 안 함	2.2%
	현재 종사하고 있음	15.0%
향후 영농 의향	조사 대상자(한번도 농사에 종사한 적 없는) 사례 수	1,727명
	1년 이내	1.1%
	1~2년 이내	1.4%
	2~3년 이내	1.5%
	3~4년 이내	1.8%
	5년 이후	6.5%
	계획 없음	87.6%
	모름/무응답	0.2%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9 귀농·귀촌 실태조사』.

3.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방법

3.1. 이론적 배경

귀촌인들의 영농전환은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에서 농업이라는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는 직업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과 다른 직업이 아닌 농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귀농·귀촌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업전환은 개인의 이상적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삶의 의미를 찾거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생애사건의 하나로 보고 있다(손유미 2001; 양안나 2010; 이지연 2009; 전현영 2013; 전현영·손은령 2014; Dirkx et al. 2006). 직업전환은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는 것이므로 전환 또는 변경하는 직업과 기존 직업의 유사도에 따라 유사도가 높은 경력전환과 유사도가 낮은 경력변경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오인수 외 2004; Hall 1976; Lawrence 1980).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것은 직업을 전환하려는 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실제로 직업을 전환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실제 행동이 내부적인 의도에서부터 출발하더라도 의향과 실

제 행동 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Ajzen 1991; Ajzen et al. 2004; Sheeran and Webb 2016). 직업의 전환 의도와 행동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직무 대안들을 통한 당김(pull)과 개인의 태도나 동기와 같은 밀어냄(push)의 복합적 요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Lee et al. 1999). 직업을 전환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거나 좀 더 범주를 세분화하여 개인의 특성요인, 직무와 관련된 구조적 특성요인, 그리고 개인과 직무를 넘어선 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기도 하였다(최윤미·길혜지 2012; Burns 2010; Greenhaus et al. 2000). 개인적 특성요인은 개인의 직무 만족도와 연령, 근속 연수, 부양가족 수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구조적 특성요인은 급여, 직무성과, 승진 기회 등 직무 관련 요인들이며 외부 요인은 실업률, 신규 채용률, 노동조합 존재 유무 등 노동시장 환경과 같은 환경적 특성을 일컫는다(Cutton and Tuttle 1986; Driver 1988; Rhodes and Doering 1983). 현대 사회에서는 고용 불안정과 같은 경제적 이유로 직업전환이 자주 일어나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김기홍 외 2008; 김두순 외 2012; 김안국 2005)이 구조적 특성요인을 강조하지만, 개인에 따라 그리고 발생 시점에 따라 직업전환의 영향과 적응 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요인을 강조한다(Schlossberg 1994; Schlossberg et al. 1995). 특히, 직무의 특성이 이직과 이직의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영주 2010; 황영훈 2017). 본 논문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농업으로의 직업 및 진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귀농과 관련된 연구와 연계되어야 한다.

귀촌 후 영농으로의 전환은 새로운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결정요인을 찾기 위해 귀농·귀촌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농·귀촌은 일반적으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지역적 이동이 이루어지고, 직업적으로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인구의 지역적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박시현·최용욱 2014; 우성호·이성근 2015). 도시에서 농촌으로 지역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귀농·귀촌을 설명하기 위해 Lee(1966)가 제시한 출발지(origin)와 목적지(destination) 간 압출-흡입(push-pull) 이론을 활용해 왔다. 이 이론은 인구이동이 일어나는 두 지역을 비교할 때 인구를 떠나게 하는 압출요인(push-factor)과 인구를 끌어들이는 흡입요인(pull-factor)을 구분하여 인구이동을 설명한다. 즉, 도시의 부정적 요소와 농촌의 긍정적 요소를 활용하여 귀농·귀촌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Lee(1966)의 관점을 바탕으로 Brown and Glasgow(2008)는 미국의 은퇴자들의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에 대해서,

Andersen(2009)은 덴마크의 이도향촌 현상인 역도시화(counter-urban migration)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설명에는 도시의 부정적 요인들인 압출요인과 농촌의 매력적인 요인들인 흡입요인을 설명하면서 주거비나 실업 등 경제적 요인과 자연환경 등 비경제적 요인을 구분하고 있다.

이 이론적 틀은 전통적으로 발생해 왔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에 대한 설명에 활용되었던 인구 이동 이론과 달리 도시에서 농촌,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등 다양한 경우들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설명 논리가 매우 단순하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에 실업이나 물가 등 도시의 부정적 요소나 농촌의 긍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및 사회의 구조적 요인과 이주하는 인구의 나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는 접근도 이루어졌다(Hosszu 2009). 이러한 Lee(1966)의 이론적 틀에 Hosszu(2009)의 관점을 보완하여 박시현·최용욱(2014)이 다양한 요인들을 구조요인, 압출요인, 흡입요인, 정책요인, 개인의사 결정요인들로 구분하여 귀농·귀촌 요인을 분석하였다. 경제성장 둔화, 인구구조 변화, 은퇴 시기 및 사회보장 정도, 정주패턴 변화, 교통통신 발달을 구조요인으로, 높은 생활비, 긴 통근 시간, 과도한 업무, 경쟁적인 일상생활, 은퇴 후의 무료한 삶을 도시의 압출요인으로, 안전 먹거리 자가 생산, 생태적인 삶, 농업 관련 사업 기회 증대, 사회적 일자리 기회 증대, 저렴한 생활비, 수려한 풍광을 농촌의 흡입요인으로, 정부의 정책, 지자체의 각종 유인 조치를 정책요인으로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 선호, 도시생활 스트레스 탈출, 생태적인 삶, 자녀 교육관 변화, 연령, 은퇴를 개인의사결정요인으로 꼽았다. 우성호·이성근(2015)도 일자리, 사업, 실직, 물가, 주택난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스트레스, 범죄율, 도시불만족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식수와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도시의 압출요인으로 보았고, 농촌의 흡입요인으로는 농업전망, 영농승계, 일자리, 생활비와 같은 경제적 요인, 자녀교육, 연고지, 가족 동의와 같은 사회적 요인, 자연환경, 생태적 삶, 건강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구분하였다. 보통 소득 감소나 저소득이 도시의 압출요인으로 많이 다루어졌고(임혜영 1999; 조록환 1998; 유정규 1998; 이정관 1998), 농촌의 흡입요인으로 농촌의 자연환경 외에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과 같은 긍정적인 농업전망과 농업관련 사업 및 일자리 기회도 다루어졌다(박시현·최용욱 2014; 이정관 1998; 정철영 1999).

이러한 압출-흡입 요인 외에도 정책적 요인들과 개인별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되었다. 강대구(2007)는 도시의 부정적 요소 때문에 귀농한 경우는 귀농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순덕 외(2005)는 농촌이주의사의 결정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농업·농촌 관련 특

성 요소들을 독립변수화하여 분석했는데, 경제적 요소보다는 농업·농촌 관련 특성이 흡입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실증연구들에서는 나이와 같은 개인의 특성이 이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덕 1991; 손승영 1990; 이은우 1993; 박시현·최용욱 2014; Hosszu 2009). 문승태·김선애(2011)는 귀촌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시민의 월평균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농촌의 주변 편의시설, 지역사회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등은 영향을 미치나 공연 및 전시 시설의 편리성 등 사회·문화적 측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진화·김새봄(2015)은 귀농자와 예비귀농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귀농의 결정요인으로 귀농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인 연령, 배우자 동행 여부, 교육 수준과 직업배경 외에 귀농 동기, 귀농교육 준비 기간, 귀농 소요비용, 귀농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등 귀농 관련 정보를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직업전환 의도와 관련하여 외부환경적 특성, 직무 관련 특성, 개인적 특성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관련 요인들을 보다 세분화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압출-흡입 요인을 바탕으로 한 인구이동이론에 구조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가미해 귀농·귀촌 결정요인들을 보다 세분화하려 했던 시도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간략히 범주화하여 접근하는 연구들도 있었다(마상진 2018; 최원실 외 2020; Williams and Jobs 1990). 물론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의 정도에 따라 귀농·귀촌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유형과 동기를 구분하여 접근하려는 시도였다(마상진 2018; 최원실 외 2020). 요인들을 구분하기 위해 최돈우 외(2019)는 요인 분석을 통해 귀농 결정의 요인들을 크게 귀농 후 경영성과 요인과 귀농 관심도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는데 요인을 찾는 방법론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이론적 접근 방식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접근하면 요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다. 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으로의 전환 의향 요인을 분석할 때 선행연구들에서처럼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그리고 개인 및 가구정보 관련 영역에 귀촌 관련 정책을 포함한 귀촌 관련 영역을 추가하여 범주화하면 관련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3.2.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분석 모형은 귀촌인들이 귀촌 후 농업생산 종사 의향 여부와 같은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모형에 적용하는 이원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이다. 이원선택모형은 이원선택의 두 대안을 0과 1(특정 대안이면 1, 다른 대안이면 0)의 종속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회귀모형(OLS)으로는 특정 대안을 선택할 확률을 추정하기 어렵다. 즉, 이들 종속변수의 조건부 평균이 통상적인 회귀모형에서 요구되는 선형의 함수 형태와 무한대의 연속변수 형태를 따르지 않고 분포의 정규성도 갖추고 있지 않다(Gujarati 2016; Hill et al. 2013; Wooldridge 2002). 이러한 이원선택모형에는 로지스틱확률분포(logistic probability distribution)나 정규확률분포(normal probability distribution)를 활용해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으로 추정하는 로짓모형(logit model)과 프로빗모형(probit model)이 많이 사용되는데,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덜 복잡한 로짓모형을 활용한다.

로짓모형은 종속변수의 비선형 형태의 조건부 평균을 선형함수 형태로 변형시키기 위한 링크함수로 두 대안의 선택 비율인 odds 비율($p/1-p$)에 로그값을 취한 로짓링크함수(L_i)를 도입한다. 즉, 로짓링크함수를 통해 odds 비율이 회귀계수 간 선형관계를 갖게 해 추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Gujarati 2016). 이때, 종속변수는 특정 대안의 확률이 아닌 대안들 간의 비율인 odds 비율이지만 계수들이 추정된 이후에는 로그함수의 역함수 계산 등을 활용해 특정 대안에 대한 확률을 추정해 낼 수 있다. 개별 설명변수의 한 단위 변화가 특정 대안을 선택할 확률에 미치는 효과인 한계효과(marginal effect)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때 여타의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text{종속변수 } Y_i = \begin{cases} 1 & \text{귀촌 후 영농전환 의향이 있는 경우} \\ 0 & \text{그렇지 않은 경우} \end{cases}$$

$p_i = \Pr(Y_i = 1)$ 이고 $1 - p_i = \Pr(Y_i = 0)$ 이라고 할 때, 로짓모형은 아래와 같다.

$$L_i = \ln\left(\frac{p_i}{1 - p_i}\right) = BX + w_i \tag{3}$$

여기서 X는 설명변수들이고 B는 그들의 계수이며, w_i 는 오차항이고 로지스틱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위의 로짓모형은 선형회귀모형이나 통상적인 최소자승법(OLS)을 통해 추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귀촌 후 영농 전환 의향이 있는 경우($p_i=1$)와 그렇지 않은 경우($p_i=0$)에 적용되는

로짓링크함수 값은 로그함수 특성상 정의될 수 없는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추정법으로 데이터로 사용된 표본을 관측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미지의 모수(parameter)인 계수들을 추정하는 최우추정법(MLE)을 활용한다. 최우추정법은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도출하기 위해 오차항의 확률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로짓모형에서는 로지스틱 확률분포를 가정한다.

로짓모형은 로그함수의 특성상 특정 설명변수의 효과를 해석할 때 계수(B)가 양수이면 종속변수의 로그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odds 비율($p/1-p$)이 1보다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귀촌 후 영농전환 의향이 있는 경우(p_i)’가 ‘그렇지 않은 경우($1-p_i$)’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계수의 부호가 결과 해석에 중요하게 된다. 물론, 설명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특정 대안(귀촌 후 영농전환 의향)의 확률변화 정도를 계측하는 한계효과는 미분의 연쇄법칙(chain rule)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때 한계효과는 전개해보면 $\partial p_i / \partial X_i = (\partial p_i / \partial L_i)(\partial L_i / \partial X_i) = (\partial p_i / \partial L_i)B$ 로 특정 설명변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계측 시점의 확률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계효과는 추정에 사용되는 통계 패키지들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Stata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3. 분석 자료

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2017~2021년의 귀농·귀촌 종합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2016년도에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중 귀촌가구 1,006명을 조사한 자료의 마이크로 데이터이다.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2016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시행되었으나 실태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16년도 자료뿐이어서 부득불 2016년도 실태자료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6년도 귀촌 실태조사 자료의 조사 응답자 특성은 아래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다. 첫 귀촌 연도의 비중은 2013년이 36.5%, 2014년이 29.2%, 2015년이 34.3%이고, 연령대는 50대가 3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가 29.3%, 40대가 19.6%, 30대 이하가 9.4%, 70대 이상이 8.7%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2명이 4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1명이 21.1%, 3명이 17.0%, 4명 이상이 16.3% 순으로 나타났다. 귀촌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17.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충남 14.7%, 전남 14.3%, 경북 11.1%, 충북과 경남 10.1%, 강원이 9.9%, 전북이 8.6%, 제주가 3.7%로 나타났다.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006명의 귀촌 가구 중에 농업생산 종사 여부를 조사하여 ‘귀촌 후 한번도 농업생산에 종사한 적이 없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업생산으로의 전환, 즉 귀농으로의 전환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때 농업생산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를 기준으로 당시 조사표에서 ① 연간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 ② 현재 논이나 밭을 1,000㎡(0.1ha, 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 ③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지 여부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였다(김정섭 외 2016). 조사 결과, 전체 사례 수의 82.8%인 662가구가 귀촌 후 농업생산에 한번도 종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이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 비중은 현재 통계청의 통계정보 KOSIS에 공표되어 있는 가장 최근 조사인 2019 귀촌 실태조사에서의 비중(82.8%)과 동일하다. 본 논문은 귀촌 후 한번도 농업생산에 종사한 적이 없는 662개의 샘플 중에 향후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 다시 말해 귀촌에서 귀농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표 5. 2016 귀촌 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구성

구분		사례 수(가구)	구성비(%)
전 체		1,006	100.0
귀촌 연도	2013년도	367	36.5
	2014년도	294	29.2
	2015년도	345	34.3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95	9.4
	40대	197	19.6
	50대	331	32.9
	60대	295	29.3
	70대 이상	88	8.7
가구원 수	1명	212	21.1
	2명	459	45.6
	3명	171	17.0
	4명 이상	164	16.3
지역	경기	174	17.3
	충북	102	10.1
	충남	148	14.7
	전북	87	8.6
	전남	144	14.3
	경북	112	11.1
	경남	102	10.1
	강원	100	9.9
	제주	37	3.7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6 귀농·귀촌 실태조사』.

표 6. 2016 귀촌 실태조사 기준 귀촌 후 농업생산 종사 유무 비중

농업생산 종사 유무	사례 수	비중
전 체	1,006명	100.0%
한번도 종사한 적 없음	662명	82.8%
종사한 적 있으나 현재는 종사 안 함	29명	2.2%
현재 종사하고 있음	315명	15.0%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6 귀농·귀촌 실태조사』.

3.4.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종속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향후 영농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한 이원선택변수(binary choice variable)로 영농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였으며, 응답자의 24.2%가 향후 영농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명변수는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대로 직업전환 및 귀농·귀촌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개인 및 가구정보 측면, 귀촌 관련 측면을 고려하였던 것처럼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고, 범주별 요인들은 분석 자료인 귀촌 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된 조사 항목을 반영하여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귀농·귀촌의 요인 및 정착 실태 등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개인적 특성, 귀촌 관련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고찰한 연구들(김은석·하지영 2016; 김정섭 외 2016; 마상진 외 2015; 마상진 2018; 마상진·남기천 2015; 박대식·남승희 2015; 우성호·이성근 2015)이나 농촌의 실태에 대한 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박대식 외 2017b; 박대식 외 2018b; 성주인 외 2019)과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귀촌인의 영농전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귀촌과 관련하여서는 귀촌 연도, 귀촌 준비 기간, 가족 지지도, 귀농·귀촌 교육, 정착 자금, 정부의 관련 정책 수혜 여부³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고(강대구 2007; 마상진·남기천 2015; 정진화·김새봄 2015; 최원실 외 2020),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귀촌 전 가구소득, 귀촌 후 현재(조사 시점) 가구소득, 향후 가구소득 전망과 같은 가구소

3 정부의 관련 정책 수혜 여부는 조사 시점에 운영 중이던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정책(박람회와 귀농귀촌종합센터 등과 같은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 지원, 귀농인의 집 등과 같은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귀농닥터 등의 상담/컨설팅 제공, 세계 지원)과 지방정부 귀농·귀촌 정책(농지/주택/일자리 등의 정보 제공, 주택 수리 및 이사 등의 정착 자금 지원,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교육/양육비 및 출산장려금 등의 생활 관련 지원, 동아리 및 모임 지원 등의 관계 형성 지원) 중 하나라도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변수로 한 것.

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과 귀촌 후 농관련 직업 여부, 창업활동 여부와 같은 경제활동 부분을 반영코자 하였으며(마상진 2018; 문승태·김선애 2011; 우성호·이성근 2015; 조록환 1998; 최원실 외 2020),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 정도, 문화 및 여가활동 지역의 범위, 귀촌 후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등을 변수로 활용하였다(강대구 2007; 문승태·김선애 2011; 우성호·이성근 2015; 최원실 외 2020). 이에 더하여 조사 대상자의 개인 및 가구 정보와 관련된 가구원 수, 연령, 가구주 교육 수준, 농업계 학교 졸업 여부 등을 추가하였다(강대구 2007; 마상진 2018; 윤순덕 외 2005; 최원실 외 2020; Hosszu 2009). 변수들에 대한 간략한 통계정보는 아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귀촌과 관련하여 귀촌 연도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개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귀촌 연도는 2013년도가 33.8%, 2014년도 30.2%, 2015년도 36.0%이다. 귀촌을 준비한 기간은 평균 24.8개월이고 준비 당시 가족 지지도는 평균 3.6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 조사 결과, 응답자의 19.0%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착 자금은 평균 166.4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귀농·귀촌 관련 정부 정책 중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 중에 하나라도 혜택을 받은 귀촌인은 17.5%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귀촌 전 가구총소득은 귀농 직전 연도 기준으로 연평균 42.0백만 원으로 나타났고, 귀촌 후 조사 연도의 연평균 가구총소득은 30.2백만 원으로 28.0% 감소하였고, 조사 당시 향후 가구소득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21.3%였다. 귀촌 후 농관련 직업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농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5.0%로 나타났고, 귀촌 후 농사를 짓는 것 외에 창업 경험이 있는 귀촌인 비율은 10.7%였다.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평균 2.24로 보통 이상⁴으로 좋았으며,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 정도⁵는 평균 3.91로 ‘가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여가활동을 주로 하는 지역 범위가 마을이나 인근 마을인 귀촌인의 비율은 8.3%였고, 귀촌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3.70으로 ‘보통’ 이상, ‘만족’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가구 정보와 관련해서 가구원 수는 평균 2.3명이고 가구주의 연령은 50대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4.7%, 중학교 졸업자가 9.5%, 고등학교 졸업자가 38.2%, 대학교 졸업자가 43.5%, 대학원 재학 이상이

4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조사 설계 당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좋지 않음을 의미하게 되어 있음.

5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 정도도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설계가 되어 있음.

4.1%로 나타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농업계 학교 졸업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표 7.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특성

구분	변수 명	변수 설명	관측치 (개)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종속 변수	영농전환 의향	향후 영농으로 전환할 의향(있으면=1)	662	0.242	0.428	0	1	
귀촌 관련	귀촌 연도	2013년도 귀촌 여부 더미 변수(2013=1)	662	0.338	0.474	0	1	
		2014년도 귀촌 여부 더미 변수(2014=1)	662	0.302	0.460	0	1	
		2015년도 귀촌 여부 더미 변수(2015=1)	662	0.360	0.480	0	1	
	준비 기간	귀촌 준비한 기간(개월)	662	24.8	29.3	1	240	
	가족 지지도	귀촌 당시 가족의 지지 정도 (1~5레벨, 매우 반대(1)에서 적극 지지(5)까지)	662	3.634	0.764	1	5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교육 이수 여부(교육 이수 =1)	662	0.190	0.393	0	1	
	정착 자금	귀촌 정착자금(단위: 백만 원)	662	166.4	160.8	0.1	2000	
경제적 측면	귀농·귀촌 정부 정책	정부 정책 수혜 여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다양한 정책 중 하나 이상 혜택받은 경우=1)	662	0.175	0.380	0	1	
	귀촌 전 가구총소득	가구총소득(귀촌 직전 연도 연간소득, 단위: 백만 원)	655	42.0	31.3	0	300	
	귀촌 후 가구총소득	가구총소득(귀촌 후 조사 연도 연간소득, 단위: 백만 원)	655	30.2	26.6	0	200	
	가구소득 전망	가구소득 전망이 낙관적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 전망=1)	662	0.213	0.410	0	1	
	귀촌 후 농관련 직업	귀촌 후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가 농관련 산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단, 농사일은 제외) (있으면=1)	662	0.050	0.218	0	1	
사회 문화적 측면	귀촌 후 창업활동	귀촌 후 농사일 외 창업활동 여부(있으면=1)	662	0.107	0.310	0	1	
	지역주민과의 관계	1. '매우 좋음', 2. '좋음', 3. '중지도 나쁘지도 않음', 4. '나쁨', 5. '매우 나쁨'	662	2.240	0.670	1	4	
	마을 회의나 행사 참여 정도	1. '주도적이고 적극 참여', 2. '자주 참여하고 적극 의견 개진', 3. '자주 참여하나 소극 의견 개진', 4. '가 끔 참여', 5. '거의 참여 안 함'	662	3.912	1.161	1	5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역 범위	마을이나 인근 마을 =1, 그 외(읍면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주변 대도시 등)=0	662	0.083	0.276	0	1	
가구 정보	만족도	귀촌 생활의 전반적 만족도 (1~5까지,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까지)	662	3.701	0.652	1	5	
	가구원 수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수(가주주 포함)	662	2.337	1.089	1	5	
	가구주 교육 수준	연령	1. '10세 미만', 2. '10대', 3. '20대', 4. '30대', 5. '40대', 6. '50대', 7. '60대', 8. '70대 이상'	662	6.023	1.144	3	8
		교육 수준('초등학교 졸업 이하'=1) 더미변수	교육 수준('초등학교 졸업 이하'=1) 더미변수	662	0.047	0.211	0	1
			교육 수준('중학교 졸업 이하'=1) 더미변수	662	0.095	0.294	0	1
			교육 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1) 더미변수	662	0.382	0.486	0	1
			교육 수준('대학교 졸업 이하'=1) 더미변수	662	0.435	0.496	0	1
교육 수준('대학원 재학 이상'=1) 더미변수	662		0.041	0.198	0	1		
농업계 학교 여부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계 학교 졸업 여부 (농업계 고등학교, 대학, 일반대학 농업계열 =1)	662	0.029	0.167	0	1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6 귀농·귀촌 실태조사』.

4. 분석 결과

로짓모형에서 추정된 설명변수의 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귀촌 후 영농전환 의향이 그렇지 않을 의향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계효과는 그 정도를 보여준다. 아래 <표 8>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귀촌 관련 요인들 중에는 준비 기간,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정부 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 준비 기간이 길수록 귀촌 후 영농으로 전환할 의향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그 정도는 한계효과 계측 값이 보여주는 대로 1개월당 평균 0.1%(0.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촌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부 지원 등 귀농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을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귀농 관련 교육이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은 귀농인들의 영농전환 의향이 높아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귀농·귀촌 교육을 받은 귀촌인이 그렇지 않은 귀촌인에 비해 영농전환 의향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고, 그 정도는 평균 13.9%였다. 귀촌인들은 귀농·귀촌에 대한 관련 교육을 통해 영농으로 전환하는 귀농의 가능성과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귀농·귀촌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중 하나라도 혜택을 받은 귀촌인은 그렇지 않은 귀촌인에 비해 영농전환 의향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그 정도는 평균 11.6%였다. 실태조사 당시 중앙정부 정책은 박람회와 귀농귀촌종합센터 등과 같은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 지원, 귀농인의 집 등과 같은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귀농다터 등의 상담/컨설팅 제공, 세제 지원 등이 있었다. 그리고 지방정부 귀농·귀촌 정책은 농지/주택/일자리 등의 정보 제공, 주택 수리 및 이사 등의 정착 자금 지원,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 교육/양육비 및 출산장려금 등의 생활 관련 지원, 동아리 및 모임 지원 등의 관계형성 지원 정책이 있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혜택을 받은 귀촌인이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귀촌인에 비해 영농으로의 전환 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김정섭·김종인(2017)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귀농·귀촌 정책이 전반적으로 귀농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귀촌인들도 인식하게 되어, 이와 같은 부분이 영농으로의 전환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측면의 요인 중에서는 가구소득 전망, 귀촌 후 농관련 직업, 귀촌 후 창업활동이 통계적으로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구소득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귀촌인이 그렇지 않은 귀촌인에 비해 영농전환 의향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고, 그 정도는 평균 8.8%였다. 가구소득이 귀촌인의 영농으로의 전환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귀촌 전이나 귀촌 후 현재(조사 시점)의 가구소득 규모보다는 미래 가구소득에 대한 전망뿐이었다. 이는 현재의 가구소득이 귀촌인의 영농으로의 전환 의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가구소득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인 경우, 영농으로 전환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소득원으로서의 영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영농 소득의 불확실·불안정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⁶ 실제로 귀촌 후 본인이나 배우자의 생업이 농관련 산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영농으로의 전환 의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귀촌 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농사일 외의 농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귀촌인이 그렇지 않은 귀촌인에 비해 영농전환 의향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고, 그 정도는 평균 14.2%였다. 농관련 산업에 종사하면서 영농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영농으로의 전환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귀촌 후 농사일이 아닌 분야에서 창업활동을 했던 귀촌인들은 타 산업 분야에서 자신의 귀촌 전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영농은 과거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낮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귀촌 후 농사일 외의 창업활동을 한 귀촌인은 그렇지 않은 귀촌인에 비해 영농전환 의향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고, 그 정도는 평균 12.0%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인 중에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와 귀촌생활의 전반적 만족도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영농전환 의향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고, 그 정도는 평균 7.7%였다. 다만 여기서는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단계별로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하는 바는 관계가 나빠질수록 영농전환 의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역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마상진 외(2018)는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어려운 점으로 마을주민들과의 인간관계 문제가 3순위에 들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지역주민과 좋은 관계를 맺

6 가구소득 전망이 완전한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적으로 결정된 변수일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검정한 결과, 내생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귀촌 후 가구총소득과 만족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생성에 대해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을수록 영농으로 전환 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통해 영농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영농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같은 불확실성은 좋은 관계를 통한 공동체성으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정지인·박경옥 2015). 지역사회와

표 8. 추정 결과

구분	변수 명	계수(B)	표준편차	P값	한계효과 (dp/dx)
귀촌 관련	귀촌 연도_2013	-0.3195	0.2448	0.192	-0.0495
	귀촌 연도_2014	-0.3654	0.2525	0.148	-0.0566
	준비 기간	0.0070*	0.0033	0.035	0.0011
	가족 지지도	0.1593	0.1443	0.269	0.0247
	귀농·귀촌 교육	0.8937 [‡]	0.2606	0.001	0.1386
	정착 자금	0.0002	0.0006	0.803	0.00002
	귀농·귀촌 정부 정책	0.7484 [‡]	0.2636	0.005	0.1160
경제적 측면	귀촌 전 가구 총소득	0.0017	0.0038	0.656	0.0003
	귀촌 후 가구총소득	-0.0077	0.0051	0.132	-0.0012
	가구소득 전망	0.5643*	0.2431	0.020	0.0875
	귀촌 후 농관련 직업	0.9176*	0.4411	0.038	0.1422
	귀촌 후 창업활동	-0.7767*	0.3855	0.044	-0.1204
사회·문화적 측면	지역주민과의 관계	-0.4954 [‡]	0.1637	0.002	-0.0768
	마을회이나 행사 참여 정도	0.0608	0.0965	0.529	0.0094
	문화 및 여가활동 지역 범위	-0.4388	0.3982	0.270	-0.0680
	만족도	-0.3825*	0.1719	0.026	-0.0593
가구 정보	가구원 수	0.3023 [‡]	0.1065	0.005	0.0469
	연령	0.0524	0.1152	0.649	0.0081
	가구주 교육 수준_초등학교	-1.1087	0.9558	0.246	-0.1719
	가구주 교육 수준_중학교	0.1834	0.6469	0.777	0.0284
	가구주 교육 수준_고등학교	0.4308	0.5339	0.420	0.0668
	가구주 교육 수준_대학교	0.4314	0.5228	0.409	0.0669
	농업계 학교 여부	-0.2477	0.5713	0.665	-0.0384
	상수항	-1.1396	1.3052	0.383	

주 1) 위의 추정에서 관측치=655, log likelihood=-313.290, likelihood ratio(LR) statistic $\chi^2=99.46$ (자유도=23)으로 모형의 유의성 테스트의 p-value=0.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Pseudo-R2=0.1370

2) †유의수준 1%,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3) 한계효과는 평균값(Average marginal effects)임.

4) 귀촌 연도 더미에서는 완전한 공선성(perfect collinearity)을 피하기 위해 2015년도를 제외했고, 가구주 교육 수준에서는 대학원 이상을 제외하였음.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6 귀농·귀촌 실태조사』.

의 좋은 관계처럼 귀촌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감도 영농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 영농으로의 전환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영농전환 의향이 유의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고, 그 정도는 한 단계당 평균 5.9%였다. 끝으로 귀촌 가구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영농전환 의향이 유의수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고, 그 정도는 1명당 평균 4.7%였다.

5. 요약 및 결론

귀촌인들의 영농전환은 직업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전 생애의 어느 시점에든 일어날 수 있는 생애사건의 하나(이지연 2009; 전현영 2013; 전현영·손은령 2014)이므로 이를 통해 성공적인 영농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귀촌인들의 귀촌 후 영농으로의 전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기 위해 귀촌 관련 요인들, 경제적 측면의 요인들, 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인들, 그리고 가구 정보의 범주 내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귀촌 관련 요인들 중에는 준비 기간,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정부 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측면의 요인들 중에는 가구소득 전망, 귀촌 후 농관련 직업, 귀촌 후 창업활동이, 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인들 중에는 지역주민과의 관계와 만족도가, 가구 정보와 관련해서는 가구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은 귀촌 후 창업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농전환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 귀촌 관련하여 준비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경우 영농전환 의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직업전환 연구에서 공식적·비공식적 교육 등의 준비가 직업전환과 전환 후 적응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황영훈 2017). 귀촌 관련 준비는 영농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예비 귀촌인들의 준비 과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비 귀촌인

7 조사표의 만족도에서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으로 단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추정결과 만족도 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만족도와 영농의향은 정의 관계(비례관계)임을 나타냄.

들의 준비 과정과 귀촌인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기회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홍보 내용에는 귀촌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과 영농을 통한 소득 창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가구소득 전망과 귀촌 후 농관련 직업, 귀촌 후 창업활동이 영농전환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농업으로 직업을 전환했을 때 가구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농관련 직업에 종사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점이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다. 반면 귀촌 후 창업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 영농으로의 전환 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명확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볼 때, 전환할 직업의 특성에 대한 정보와 관련 분야 경력이 직업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강인주 2015; 오인수 외 2004; 최윤미·길혜지 2012; Burns 2010; Greenhaus et al. 2000; Lawrence 1980). 특히, 예비 귀농인 또는 귀농 관심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귀농귀촌종합센터와 각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예비 귀촌인이나 귀촌 관심자의 귀농으로의 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지 않기 때문에 보강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와 만족도가 영농전환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화 등 비공식 교육과 같은 무형의 학습이 직업전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황영훈 2017). 이를 위해 사회·문화적으로 지역주민과 좋은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마상진 외 2018).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지역주민과 좋은 관계는 귀촌인들의 영농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대상에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도 포함하는 적극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중에 동아리 및 모임 지원 등 관계 형성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맞춤형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호응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프로그램들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미정 2019; 이은생 2014).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조치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6년도에 수행된 귀농·귀촌 실태조사 중 귀촌 실태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는데, 2018년, 2019년에도 동일하게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가용한 데이터가 2016년도 자료

밖에 없었던 점이 연구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귀촌인들의 영농 전환 의향이 실제 영농전환으로 얼마나 현실화하였는지 추적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행동이론은 개인의 실제 행동이 개인의 의향에서부터 출발하고, 일정 부분 의향과 실제 행동 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Ajzen 1991; Ajzen et al. 2004; Sheeran and Webb 2016). 따라서 귀농·귀촌 실태조사와 함께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귀농인과 귀촌인 각각에 대한 장기 패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귀농인들의 영농전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필요들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제1호. pp. 59-98.
<http://doi.org/10.23840/agehrd.2007.39.1.59>

강인주. 2015. “사무직 근로자의 이직의도와 경력학습, 경력동기, 조직지원인식, 조직몰입, 경력몰입 및 고용가능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국가통계포털. 2020. 『귀농어·귀촌인통계』. <<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 2020. 『2019 귀농·귀촌 실태조사』. <<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 2017 『2016 귀농·귀촌 실태조사』.

김기홍. 2018. “귀농귀촌 개념과 정책 방향 재정립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28권 제2호. pp. 47-86.
<http://doi.org/10.31894/JRS.2018.10.28.2.47>

김기홍, 임 언, 이정표. 2008. 『중고령자 진로전환지원 체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두순, 이성재, 이주현, 김지은. 2012.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3차년도 추적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김미정. 2019. “충북 귀농귀촌인 증가세속 지역주민융화프로그램 호응.” 중부매일 기사.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4796>>. 검색일: 2020. 9. 30.

김안국. 2005.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은석, 하지영. 2016.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선택 동기와 준비 경험: 대졸 남성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36권 제2호. pp. 419-442.

김정섭, 김종인. 2017.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 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제24권 제1호. pp. 33-48.
<http://doi.org/10.12653/jccd.2017.24.1.0033>

김정섭, 마상진, 김종인, 오정훈. 2016.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진덕. 1991. “지역간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충북개발연구』 제2권. pp. 137-153.

농촌진흥청. 2017. “귀농·귀촌인 10명 중 4명 마을리더로 변신 - 농촌진흥청, ‘귀농·귀촌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4~’18) 결과 발표 -.’ 보도자료.
 <http://www.rda.go.kr/board/board.do?mode=view&prgId=day_farmprmninfoEntry&dataNo=100000757360>.

마상진. 2018. “귀농·귀촌 동기 유형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50권 제1호. pp. 53-72.
<http://doi.org/10.23840/agehrd.2018.50.1.53>

마상진, 남기천. 2015.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유형별 관련 요인 탐색.” 『농촌사회』 제25집 제1호. pp. 89-124.

마상진, 박대식, 박시현, 최윤지, 최용욱, 남기천. 2015.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박대식, 안석, 윤순덕, 남기천. 2018.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3차년도(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승태, 김선애. 2011. “도시민의 농촌생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3권 제2호. pp. 75-93. <http://doi.org/10.23840/agehrd.2011.43.2.75>

문영주. 2010.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동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다중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대식, 남승희. 2015.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 실태와 관련 요인.” 『농촌사회』 제 25집 제1호. pp. 41-87.

- 박대식, 마상진, 채상현, 최용재, 최윤지, 윤순덕, 김경인. 2017a. 『사회적 경제 부문에 있어서 국내외의 귀농·귀촌 성공사례 조사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마상진, 최윤지, 윤순덕, 김경인, 박지연. 2017b.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마상진, 황정임, 김경인. 2018a. 『귀농·귀촌 성공사례 조사·분석 종합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안석, 김남훈, 임지은. 2018b.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2/2차년도) - 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 대상 심층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시현, 최용욱. 2014.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박시현, 정문수, 민경찬. 2019.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손승영. 1990. “노령인구 이동의 요인분석: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미 동북부의 경우-.” 『한국사회학』 제24권. pp. 121-147.
- 손유미. 2001. “실직자 직업전환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안나. 2010.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직업전환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인수, 서용원, 신강현. 2004. “조직내/외 경력이동의 개념화와 그 선행변인의 규명 및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17권 제2호. pp. 279-304.
- 우성호, 이성근. 2015. “귀농·귀촌의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6개 시군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제22권 제2호. pp. 101-116.
- 유정규. 1998. “귀농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제34권. pp. 24-41.
-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이정화. 2005. “도시장년층의 은퇴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제25권 제3호. pp. 139-153.
- 이은생. 2014. “완주군, 지역주민-귀농귀촌인 융합 교육 실시.” 전주일보 기사.
<<http://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867>>. 검색일: 2020. 9. 30.
- 이은우. 1993. “한국의 농촌도시간 인구가동함수.” 『경제학연구』 제41권 제2호. pp. 213-232.
- 이정관. 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연. 2009. “생애사 접근방법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핵심인력의 진로 단계별 국내활동 촉진 및 장애요인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pp. 133-156.
- 임혜영. 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인봉. 2018. “지방자치단체 귀촌귀농 활성화에 관한 인식조사와 정책적 함의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정보』 제32권 제4호. pp. 315-340. <http://doi.org/10.18398/kjlgas.2018.32.4.315>
- 전익수. 2019. “정부 정책이 귀농인 가구소득에 미친 효과 분석.” 『농촌경제』 제42권 제1호. pp. 103-135. <http://doi.org/10.36464/jrd.2019.42.1.005>
- 전현영. 2013. “8인 8색 진로전환 이야기.”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현영, 손은령. 2014. “두 50대 남성 직장인의 진로전환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 생계와 자아실현 사이.” 『상담학연구』 제15권 제2호. pp. 675-694. <http://doi.org/10.15703/kjc.15.2.201404.675>
- 정지인, 박경욱. 2015.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역 주민의 공동체특성.”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6권 제4호. pp. 105-118. <http://doi.org/10.6107/JKHA.2015.26.4.105>
- 정진화, 김새봄. 2015. “귀농인의 귀농 결정요인과 귀농유형 선택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6권 제5호. pp. 139-164.

- 정철영. 1999. “IMF에 따른 귀농희망 실업자를 위한 영농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2권 제1호. pp. 1-26.
- 조록환. 1998. “귀농자의 생활실태 분석.” 『도시와 빈곤』 제34권. pp. 42-47.
- 최돈우, 김동춘, 이항아, 임청룡. 2019. “도시민 귀농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농촌계획』 제25권 제3호. pp. 29-36.
<http://doi.org/10.7851/Ksrp.2019.25.3.029>
- 최원실, 허태호, 이상현. 2020. “역 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경제』 제43권 제3호. pp. 65-90.
<http://doi.org/10.36464/jrd.2020.43.3.004>
- 최윤미, 길혜지. 201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력전환 결정요인 탐색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2호. pp. 1-21.
- 통계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2018.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정보보고서』. <<http://kosis.kr/>>.
- 황영훈. 2017. “대기업 영업직 초기경력자의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조직사회화 및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ndersen, H. S. 2009. “Explanations for Long-Distance Counter-Urban Migration into Fringe Areas in Denmark.” *Population, Space and Place (Online)*. vol. 17, no. 5, pp. 627-641. <https://doi.org/10.1002/psp.568>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vol. 50, no. 2, pp. 179-211.
- Ajzen, I., T. C. Brown, and F. Carvajal. 2004. “Explaining the discrepancy between intentions and actions: the case of hypothetical bias in contingent valuatio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0, no. 9, pp. 1108-1121. <https://doi.org/10.1177/0146167204264079>
- Brown, D. L. and N. Glasgow. 2008. *Rural Retirement Migration*.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1-4020-6895-9>
- Burns, E. 2010. “Capture in the diversity of transition from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19, no. 3, pp. 43-51. <https://doi.org/10.1177/103841621001900307>
- Cutton, J. L. and J. M. Tuttle. 1986. “Employee turnover: A meta-analysis and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1, no. 1, pp. 55-70. <https://doi.org/10.5465/amr.1986.4282625>
- Dirkx, J., J. Mezirow, and P. Cranton. 2006. “Musing and reflections on the meaning, context, and process of transformative learning: A dialogue between John M. Dirkx and Jack Mezirow.”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vol. 49, no. 2, pp. 123-139. <https://doi.org/10.1177/1541344606287503>
- Driver, M. J. 1988. “Careers: A review of personal and organizational research”.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3, pp. 245-277.
- Greenhaus, J. H., G. A. Gallanan, and V. M. Godshalk. 2000. *Career Management*. FL: Dryden.
- Gujarati, D. 2016. *Econometrics by Example 2nd Ed*. Palgrave Macmillan.
- Hall, D. T. 1976. *Careers in Organizations*. CA: Goodyear.
- Hill, R. C., R. E. Griffiths, and G. C. Lim. 2013. *Principles of Econometrics 3rd Ed*. John Wiley.
- Hosszu, S. 2009. “Counterurbanization.” Working Paper No.06/2009. Danish Institute of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 Lawrence, Barbara S. 1980. “The myth of the midlife crisis.” *Sloan Management Review*. vol. 21, no. 4, pp. 35-49.
- Lee, E.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vol. 3, no. 1, pp. 47-57. <https://doi.org/10.2307/2060063>
- Lee, T. W., T. R. Mitchell, B. C. Holtom, L. S. McDaniel, and J. W. Hill. 1999. “The unfolding model of voluntary

- turnover: A replic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2, pp. 450-462. <https://doi.org/10.5465/257015>
- Rhodes, S. R. and M. M. Doering. 1983. “An integrated model of career chan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8, no. 4, pp. 631-639. <https://doi.org/10.2307/258264>
- Schlossberg, N. K. 1994. *Overwhelmed: Coping with Life's Ups and Downs*. New Lexington Press.
- Schlossberg, N. K., E. B. Waters, and J. Goodman. 1995.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heeran, P. and T. L. Webb. 2016. “The intention-behavior gap.”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vol. 10, no. 9, pp. 503-518. <https://doi.org/10.1111/spc3.12265>
- Williams, A. S. and P. C. Jobes. 1990. “Economic and quality-of-life considerations in urban-rural migr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vol. 6, no. 2, pp. 187-194. [https://doi.org/10.1016/0743-0167\(90\)90005-s](https://doi.org/10.1016/0743-0167(90)90005-s)
- Wooldridge, J. M. 2002.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The MIT Press.

원고 접수일: 2020년 10월 07일
원고 심사일: 2020년 10월 21일
심사 완료일: 2021년 3월 17일